

투데이 칼럼

고창은 왜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를 유치하려고 하는가

고창군이 한빛원전 민간환경 안전감시센터를 유치하려는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방사능으로부터 주민 안전지킴이 확보'라고 할 수 있다.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는 1999년 영광군에 설치되었으며, 영광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 20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감시위원회 산하에 센터소장을 비롯한 직원 8명이 근무하며 방사능 감시업무 맡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빛원전 감시위원회에 의결권 행사에 무의미한 고창측 위원 2명만이 배정되어 있다는 점과 감시센터가 영광군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직원 임명권이 영광군수에게 있으며 인건비와 운영비 또한 국비 지원을 받아 영광군이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시센터 관계자는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이 30km로 확대되면서 현재의 감시센터 인력과 예산으로는 영광군을 위주로 한 전남권 민원업무 처리에도 버겁다"고 한다.



전민중
고창군 재난안전과 원전팀장

따라서 운영시스템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감시센터 1개소로 고창과 영광지역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중앙정부의 희망사항과는 달리 고창군을 포함한 전북권 안전감시업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방사능 누출 시 바람의 방향에 따라 영광군과 전남도는 피해가 전혀 없거나 일부 마을만 피해 입고 고창군을 포함한 전라북도 상당지역이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원자로를 냉각하고 배출되는 7C 이상 상승된 온배수

연 74억톤이 고창 앞바다로 방출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전 안전에 있어 고창군과 전북도가 영광군과 전남도에 종속될 지역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 같은 이유로 고창군은 민간환경감시센터 별도 설치 필요성을 2012년부터 중앙정부를 방문,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감시센터가 고창에 설치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감시센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물론 기획재정부의 성격상 경제적 효율성에 무게를 두고 모든 사안에 대해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일면 이해가 간다.

그러나 언제까지 현실적 피해상황을 도외시한 채 주민의 안전을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원전에 대한 문제는 원전이 소재한 전남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원전 소재지와 대등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 전북권 지역 주민들 또한 원전 관련 운영과 안전에 대한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받고 감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진흥과 경제적 효율성 보다 국민 안전 우선을 선택하였다. 원전 주변 주민들의 안전의식도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세상이 원전안전에 대해 기준과 다른 접근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

새해에는 고창군을 포함한 전라북도 주민의 안전지킴이 확보되는 원인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해 본다.

독자제언

늘어나는 고독사, 대비책은?

다세대 주택 등 빌라에서 냄새가 난다며 119에 신고하여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면 집안에서 사망한지 며칠이 지난채로 발견되었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종종 접하곤 한다.

이처럼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쓸쓸하게 사망하는 것을 '고독사'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고독사에 대한 국가통계가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무연고사 통계로 고독사 현황을 추정할 수 밖에 없는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183건의 무연고사가 발생하면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이제 는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장년층·청년층까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구형태가 4인 가구에

서 1인 가구로 변화되면서 무연고 고독사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므로, 1인 가구 및 독거노인 가구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지자체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고독사지킴이단을 활성화시켜 돌봄대상자와 1대1 자매 결연을 맺어 직접 방문을 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살피고 말벗 역할을 하는 등 1인 가구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노력 중이다. 이 같은 제도는 고독사의 가능성을 사전에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 또한 주변에 관심을 갖고 복지 사각에 놓여 있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문안순찰 등 사회에 맞는 맞춤형 치안활동을 강화하여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라본다.

최혜진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순경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독자제언

여성 대상 범죄 예방 서비스 이용을

물지마 범죄 혹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계속하여 증가함에 따라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나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직장 여성, 학생 등 국민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찰에서도 여성 대상 범죄의 두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방면에서 많은 대책들을 세우고 있다.

먼저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가 있다.

이는 심야시간에 귀가하는 여성의 주거지까지 공공근로자들이 동행하는 서비스로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서비스를 신청한 여성과 함께 주거지까지 동행하며, 범죄 우발지역을 순찰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여성이나 청소년에게 도움을 준다.

이 서비스는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도착 30분 전에 120 다산 콜센터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가 있다.

이 서비스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유용한 서비스인데, 스마트 안전귀

가 서비스 앱을 설치하여 스마트폰에 설정을 하면 일정 간격으로 제대로 귀가고 있는지 보호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서비스로 메시지를 받은 보호자는 메시지를 통해서 귀가자의 현재 위치, 남은 거리 등을 보며 귀가자에게 문제가 있는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12 긴급신고 앱'이 있다.

이 어플은 설치 후 긴급상황 시 앱을 켜서 버튼을 3초간 꼭 누르면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는 서비스로 늦은 밤에 귀가할 시에는 이 어플을 켜두고 귀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물지마 범죄나 여성 대상 범죄가 많이 인 만큼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에서도 많은 노력과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범죄에 대해 두려워만 하는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이러한 서비스들을 미리 알아두고 위험한 상황에 놓일 때를 대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대이다.

백오섭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순경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사설

전북도, 구직자들에게 희망의 근거 돼야

구랍 이야기를 해야겠다. 여자가 공무원을 9475명 증원하기로 합의 를 보았던 거 말이다. 여 측에서 당초 1만5백명을 증원으로 내놓고, 국민의 당에서는 9천 명 증원안을 내놓았는데 그것을 절충했던 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 터이다. 그래서 그때 그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던 게 생각난다. 우리 전북 지역에는 예전 그대로 정규직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동안 도내 공공기관들이 정규직 고용에 마음을 쓰고 있다고 했지만 관할은 일자리는 그 창출이 미약했다. 그래서 욕심잡아서는 그 9475명 중에서 전북 몫을 다른 광역시보다 많이 쟁겼으면 하는 것이다.

전북도는 미취업자나 비정규직 종사자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북도가 애쓰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상황이 예전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정규직이 늘기보다 비정규 일자리만 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더하여 아르바이트 같은 시간제 일자리만 넘쳐나고 있다. 그나마 요즘은 최저임금제 실시로 그 알뜰한 아파트 경비나 아르바이트 일자리마저 쪼라리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는 판이다. 그래서 다시 알아보고 싶은 게 있

다. 일자리 창출 약속 말이다. 그 일자리 창출을 말로만 해서는 곤란하다. 전북도는 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 미취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비정규직 취업자들도 바라는 바는 취직과 고용안정이다.

취업과 고용안정이 매번 희망사항에 그치고 있는데 전북도가 고민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해 그 일자리 창출 도모가 뚜렷했으면 한다. 도내 근로자 중에 비정규직 종사자가 40%를 넘고 있으니 말이다. 전북도는 관할은 일자리 구하기에 목마른 젊은이들을 역지사지해야 한다. 전북도는 일자리 마련과 관련하여 잘 생각해야 한다. 전북도는 지역 일자리의 수준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이며 고용환경이 전국에서 매년 꼴찌 수준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도내에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부족한 중에 비정규 종사자와 아르바이트생들이 그 일자리마저 흔들리고 있음은 큰 문제이다. 취업 현실이며 고용 현실이 전국의 밑바닥 수준인 지금 전북도는 더욱더 분발해야 한다. 전북도는 구직자들에게 희망의 근거가 돼야 한다는 당부이다.

발전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기대한다

전북도가 신년 기자회견의 자리에서 우렁찬 소리를 냈던 게 생각난다. 그게 열흘 저쪽의 일인데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2018년 전북도 천년을 맞아 미래를 견인할 전 북발전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한 말이 그것이다. 올해 그 발전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자력이 있어야 한다. 그 자력이 없다면 전북도의 선언은 그저 찻잔 속의 태풍에 지나지 않을 터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정부를 향해 전북의 발전이 전국 균형발전의 이정표라고 말해야겠다. 그것도 어쩌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상기시켜 주는 말이 돼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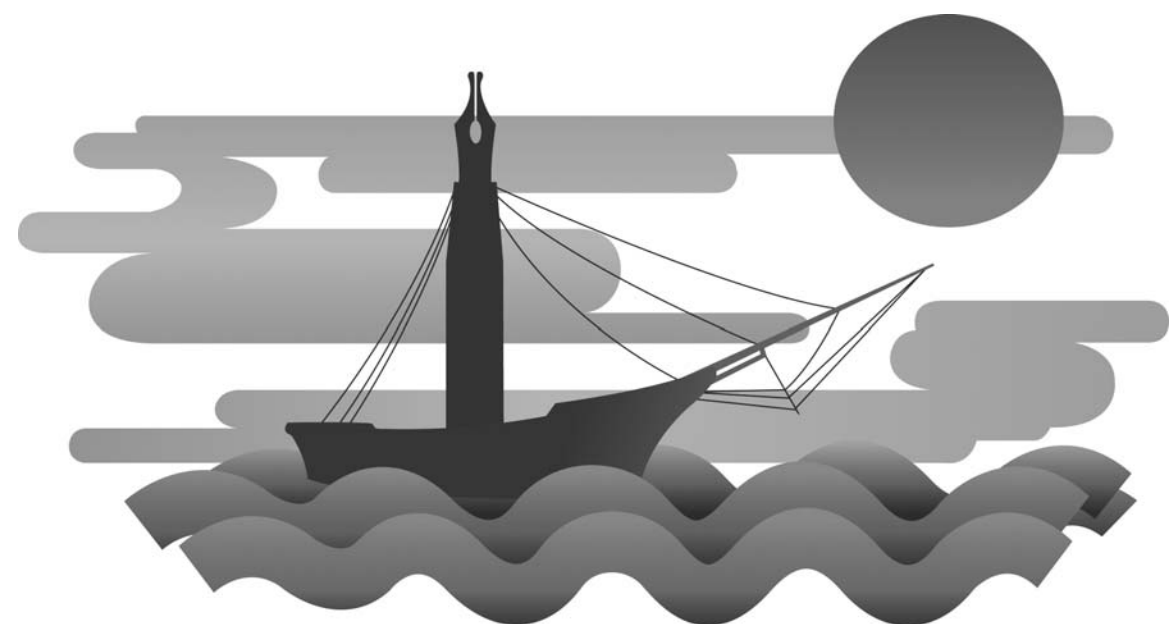
우리 지역은 전북도의 아심과는 반비례하여 낙후가 심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전북 지역은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해 낙후돼도 너무나 낙후돼 있다. 올해도 수도권 보수 인사들의 움직임이 주시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수도권에서는 규제 완화를 즐기며 말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잠잠한 반응을 보여선 안된다.

전북도는 새해 벽두부터 전북의

자존을 만났고 전북 몫 찾기를 말했다. 그래서 다시 말하는데 전북 발전이 전국 균형 발전의 이정표라는 주장은 당연하다. 우리 전북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의 낙후는 도민의 수가 많고 있다. 잘 알고 있겠지만 지난 1960년대에는 거주 인구가 250만이 넘었다. 그런데 50여 년이 흐른 지금은 185만 명을 약간 상회하고 있는 수준이다. 사람이 아니라 지역의 낙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이지 낙후라도 이런 낙후가 없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는가. 전북도는 그 이유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역대 정부들은 우리 전북을 위한 배려가 부족했다. 자칫했다가는 현 정부도 그렇듯 할 우려가 크다. 수도권에 치이고 충청권에 밀리고 영남권과 비교해 쪼대접을 당하는 것도 한도가 있어야 한다. 지역간 균등한 발전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이상이다. 전북도는 연초에 새천년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만했으므로 이제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